

제194호 (2009. 2. 16)

■ 속보/위기의 건설업

- 919 주택 500만호 공급 정책, 지연 가능성 증대

■ 경제 동향

- 1월 주택상가 가치 전망 3P 상승, 지수는 82로 침체 지속

■ 정책·경영

- 미 정부, 사회기간시설 건설로 적극적인 경기 부양

■ 정보 마당

- 다보스포럼, 세계 물 부도 사태 경고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란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일자리 창출

919 주택 500만호 공급 정책, 지연 가능성 증대

-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수요 위축 및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여론악화 등 영향 -

- 정부는 작년 '919 주택공급정책'을 통해 2018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30만호씩 300만호를 공급하고, 지방에 연간 20만호씩 200만호를 공급하는 '10년 간 50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 500만호 중 전용면적 85m² 이하 70만 가구와 국민임대, 10년 공공임대 및 영구임대 등을 통칭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기로 함.
- 최근 국내 경기침체의 가속화로 작년 주택공급 실적이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¹⁾, 올해도 전년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2기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대규모 국책 사업 택지 등 공공택지에서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도심지 내 민간택지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임.
- 그러나, 최근 국내 경기침체 가속화로 인한 주택수요 위축,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여론악화, 관련 법 개정 여부 및 일정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919 대책의 주택공급 로드맵은 올해뿐만 아니라 2010년에도 달성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 2기 신도시의 경우 최근 주택 경기의 극심한 침체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당초 계획에 비해서는 공급물량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당초 2기 신도시에서 2009년 7.8만호, 2010년 14.9만호를 공급(분양)할 계획이었음(2008년 3월 23일, 국토부 보도자료 참조).
 - 그러나, 동탄2, 위례신도시 등의 개발계획 확정지연이 몇 개월씩 지연되어 확정됨에 따라 당초 분양계획 역시 미뤄지고 있음.
 - 위례신도시의 경우 당초 2009년에 4,000가구, 2010년에 6,000가구, 2011년 이후 3만 9,000가구를 각각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2010년에 4,200가구, 2011년 이후 나머지 4만 4,800가구를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됨. 즉 2010년까지 공급 예정이던 1만 가구 중 5,800가구가 2011년 이후로 연기됨.

1) 2008년 주택공급 실적은 사업승인 기준으로 37만호에 그쳐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동탄2신도시 역시 2010년까지 공급 예정이던 물량 중 3만 2,000가구가 2011년 이후로 연기되었으며, 주택경기 침체, 보상지연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지연 가능성도 있음.
- 또한, 작년 821대책을 통해 추가 지정된 경기 오산세교 및 인천 검단신도시의 경우도 국내 경기침체와 신도시를 통한 주택 공급 과잉 등을 감안하여 당초 분양 일정이 연기되고 있음.
- 올해 전국에서 13만 가구를 건설하여 공급할 의욕적인 계획을 수립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도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통과, 그린벨트 해제 등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향후 일정 지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향후 10년간 1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보금자리주택은 올해는 전국적으로 1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이 중 60~70% 정도인 8만~9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에는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하반기에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첫 분양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며, 입주는 2012년부터로 예정되어 있음.
 - 그러나,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필요한 관련 법률에 직할시공제 등을 비롯해 여야 간 의견을 달리하는 쟁점사항이 있고, 향후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등이 필요하여 정부가 의욕적으로 수립한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 이 외에도 현 정부에서는 지난 참여정부와는 달리 도심지 내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919 대책에서 수도권에 15곳의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를 추가 지정하여 80만호를 공급할 계획을 수립했으며, 향후 역세권 개발 등 고밀도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비촉진법」 개정을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용산사태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돼 서울시 뉴타운 추가 지정, 역세권 개발사업 본격화 등의 일정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향후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체계와 절차 등에 대한 개선과 함께 당분간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임을 감안해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 일정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도 면밀하게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이홍일(연구위원-hilee@cerik.re.kr)

1월 주택·상가 가치 전망 3P 상승, 지수는 82로 침체 지속

- 경기활성화대책에 대한 기대심리로 소폭 상승, 향후 전망은 하락세 우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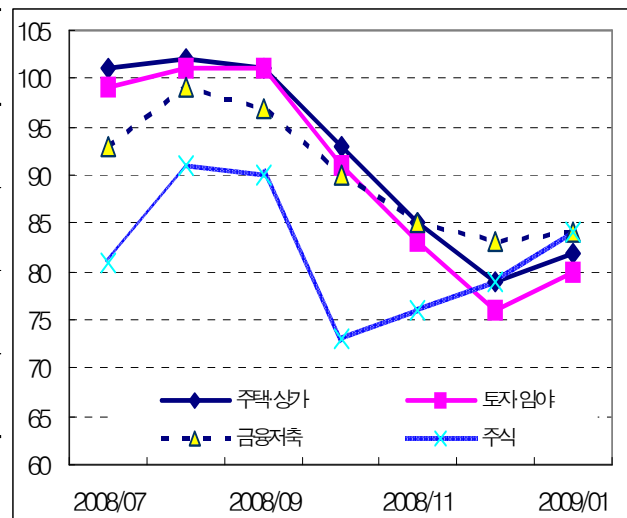
- 2009년 1월 자산항목별 가치 전망 결과 주택·상가에 대해서는 전월보다 3P가 상승하였으며, 토지·임야는 4P, 금융저축은 1P, 주식은 5P가 상승함.
- 항목별 자산가치 전망 CSI는 여전히 100 이하로, 향후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항목별 자산가치 전망 CSI〉

구분	08.7	08.8	08.9	08.10	08.11	08.12	09.1	전월 대비 증감
주택·상가	101	102	101	93	85	79	82	3
토지·임야	99	101	101	91	83	76	80	4
금융저축	93	99	97	90	85	83	84	1
주식	81	91	90	73	76	79	84	5

주 : 100 이상은 증가할 전망이 크며, 100 이하는 감소할 전망이 큰 것을 의미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 항목별 자산가치 전망 CSI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올 1월 들어 상승함.
- 2008년 말을 기점으로 부동산(주택·상가·토지·임야)보다 금융, 주식의 가치 전망 CSI가 더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 살펴보면 봉급생활자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전월보다 자산가치 전망 CSI가 상승하였으며, 자영업자는 금융저축 가치 전망 CSI가 전월보다 1P 하락함.
- 봉급생활자는 부동산보다 금융저축·주식에 대해서 자산가치 전망에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영업자는 주식에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다음으로 주택·상가, 토지·금융 순이었음.

〈직업별 항목별 자산가치 전망 CSI〉

		2008.7	2008.8	2008.9	2008.10	2008.11	2008.12	2009.1	전월대비증감
봉급 생활자	주택·상가	102	103	101	92	85	79	81	2
	토지·임야	100	101	101	91	84	77	81	4
	금융저축	93	99	97	90	88	85	86	1
	주식	81	90	88	69	76	79	83	4
자영업자	주택·상가	101	100	103	92	84	78	82	4
	토지·임야	98	100	101	88	79	71	79	8
	금융저축	93	98	95	87	80	80	79	-1
	주식	77	89	91	73	76	81	85	4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모든 자산에 대해서 향후 전망이 전월보다 상승하였으며, 6대 광역시는 토지·주식에 대해서 전월보다 상승하였으나, 금융·저축에 대해서는 1P 감소, 기타 도시는 금융저축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대해서 전월보다 상승함.
 - 서울은 금융저축·주식에 대한 평가가 부동산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타남.
 - 6대 광역시는 다른 자산에 비해 주식에 대한 자산평가가 가장 긍정적이며, 금융저축에 대해서도 부동산에 비해 양호한 평가를 내리나 전월보다는 감소됨.
 - 기타 도시의 경우 서울 및 광역시보다 주식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며, 토지·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항목별 자산가치 전망 CSI〉

		2008.7	2008.8	2008.9	2008.10	2008.11	2008.12	2009.1	전월대비증감
서울	주택·상가	106	105	106	93	84	78	83	5
	토지·임야	101	101	100	90	80	75	78	3
	금융저축	92	99	98	88	82	80	84	4
	주식	80	92	88	73	74	77	84	7
6대 광역시	주택·상가	97	100	99	94	86	81	81	-
	토지·임야	96	101	101	91	84	76	79	3
	금융저축	93	99	99	91	85	83	82	-1
	주식	82	90	93	73	75	79	83	4
기타 도시	주택·상가	101	101	100	91	85	78	82	4
	토지·임야	100	102	101	92	84	76	82	6
	금융저축	93	99	95	90	85	84	84	-
	주식	81	91	90	73	79	81	85	4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엄근용(연구원·kyeom@cerik.re.kr)

미 정부, 사회기간시설 건설로 적극적인 경기 부양

- 미국 건설 뉴딜 프로그램의 내용과 특징 분석²⁾ -

■ 미 오바마 행정부 1,590억 달러(약 230조원) 규모의 건설 뉴딜 프로그램 발표

- 건설 부문 뉴딜 프로그램은 미 정부의 8,250억 달러 뉴딜 패키지의 일부이고, 사회기간 시설(infrastructure) 관련 경기 부양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8,25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은 5,5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투자와 2,750억 달러 규모의 감세 정책으로 구성
 - 미 연방 상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제출한 경기 부양책을 현재 심의하고 있음.
- 건설 뉴딜 프로그램의 핵심 사업은 도로 건설과 전력망 건설이며, 이들의 규모가 전체 예산의 1/4에 상당하는 401억 달러임.
 - 주요 사업 중 건축 시설과 관련한 사업도 약 300억 달러에 달함.

〈미국 건설 뉴딜 프로그램 요약〉

(단위 : 억 달러)

분야	금액	주요 사업
교통시설(Transportation)	438	연방정부 지원 고속도로(300)
에너지시설(Energy)	360	전력망 구축(110)
주택시설(House/HUD)	133	공공 주택 건설 및 보수(50)
국방시설(Defense/Veterans)	115	국방부 병원 시설 건설(38)
학교시설(Schools)	201	초·중·고등(K-12) 학교시설 리모델링(140)
복지시설 (Health & Human Service Dept. Buildings)	41	국립연구소/대학 연구시설의 건설(15)
공공 기관 건물(Other Bldg.)	129	조달청(GSA) 에너지효율성 제고 프로그램(60)
수자원 및 환경시설 (Water & Environment)	171	환경청(EPA) 맑은 물 만들기 지원 기금(60)
기타	2	-
합계	1,590	-

출처 : 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 ENR.

2) 본고는 ENR(Engineering News Records)지의 최신호에 게재된 관련 내용을 정리분석한 것임.

■ 건설 뉴딜 프로그램 운영의 특징

- 주정부(시행기관)가 뉴딜 예산의 확정 후 120일 이내에 편성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지침을 설정함.
 - 따라서, 예산의 국회통과 후 4개월 이내에 발주가 가능한 준비된 건설사업(Shovel Ready Project) 위주로 건설 뉴딜 대상 사업의 리스트가 작성될 수밖에 없음.
 - 선정된 대상 사업을 12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지 못하면, 해당 예산은 타 사업으로 강제 할당
- 연방정부는 뉴딜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 집행기관(주정부 또는 연방 정부 산하기관)이 통상적으로 부담했던 분담금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의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함.
 - 연방정부 지원 고속도로 총사업비의 20% 정도를 주정부가 매칭 펀드로 부담하였던 분담금 조항을 미적용
 - 예산 편성 후 12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된 건설 뉴딜 대상 사업의 잔여 50% 예산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2010년 8월 1일까지 재정 투자를 약속
- 해당 발주기관의 전문가 부족 문제와 120일 이내 계약 체결 규정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설계-시공 분리 발주 방식보다는 ‘책임형 CM 방식(CM at Risk)’의 적용이 많아질 것이고 외부 사업관리 전문가의 활용이 높아질 전망이다.
 - 주정부나 연방정부 산하기관은 경기 침체와 누적된 재정 적자로 인하여 많은 건설 사업 관련 전문가를 해고시켜 왔음. 이로 인해 예산 집행기관의 발주 준비 작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외부 사업관리 전문가의 활용이 불가피할 것이고, 전통적인 설계-시공 분리 발주방식보다는 책임형 CM 방식(CM at Risk) 등과 같이 사업 기간과 발주 준비 기간을 단축하는 발주방식이 효과적임.

이영환(연구위원·yhlee@cerik.re.kr)

다보스포럼, 세계 물 부도 사태 경고

■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면 세계는 물 부도(water bankruptcy) 사태에 직면

-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Water Initiative 보고서는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물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기후변화 등으로 공급은 감소하여 많은 지역에서 수자원 부도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지난 50년 간 고도성장을 이룬 세계 경제는 물을 싸고 흔하게 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종의 버블 경제였으나, 앞으로 물 부족이 가속화되면 생활 여건 악화, 수질 오염, 농산물 생산 감소와 가격 폭등, 경제성장 둔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

■ 물 부족 문제는 식량난, 수질오염, 전쟁 등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물 부족으로 농업 생산이 위협을 받고, 특히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임.
 - 기후 변화 등으로 아시아, 중남미 등에서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음.
 - 수자원의 70%가 농업용수로 이용되는데, 수자원이 현재와 같이 계속 비효율적으로 이용될 경우, 2025년에는 용수부족으로 곡물생산이 30% 정도 감소할 전망
 - 인구증가 등으로 식량수요는 2050년까지 70~90% 증가하여 식량문제는 더욱 악화
 - 2030년에는 세계 인구의 55%가 자국에서는 물이 부족해 수입식량에 의존할 것임.
- 아시아 등 빠른 경제성장을 시현하는 국가에서는 도시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에 대한 수요 증가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계속 감소할 것임.
 - 대부분의 지역에서 용수 수요증가의 65%는 공업용수가, 30%는 생활용수가 차지하는데, 그 결과 대체 관계에 있는 농업용수는 더욱 부족하게 될 것임.
- 물 스트레스 국가³⁾에서는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미흡한 실정
 - 대부분의 지역에서 물에 대한 정치적 관심은 국지적이고, 점진적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3) 물 스트레스 국가란 1인당 가용수자원이 1,700m³ 이하로 수자원개발이 없을 경우,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국가를 말하며, 우리나라도 1인당 가용 수자원 양은 1,512m³으로 여기에 속함.

- 많은 나라에서 수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자료가 부실하여, 설령 위험한 수준으로 내려가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과도한 용수이용은 심각한 수질오염 및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세계 주요 하천들이 농업용수 이용 등으로 유지 유량이 한계상황에 있음.
 - 농업용수 등으로 하천수가 과도하게 유출될 경우, 유량감소로 염분증가, 부영양화, 습지감소 등으로 생태환경이 악화되고,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물 부족으로 대량 난민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히말라야, 티베트, 안데스 등 고산지대 빙하는 세계 주요 하천에 물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이들 빙하가 감소하여 현 상태로 가면 2100년경에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 이럴 경우 주요 하천의 수원이 고갈되어 국제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음.
 -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물 부족으로 2020년에 1.5억명의 국제난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외국에서 식량 수입으로 문제를 피해갈 수도 있을지 모르나, 현재의 국제 농산물 교역 시스템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 농산물 수입이 원활하면 아시아지역은 2025년까지 농업용수의 12%를 절약 가능
 - 그러나, 국제무역에서 농산물 비중은 계속 줄어들어 9%에 불과하고, 소수의 메이저에 의해 좌우되면서 가격변동이 크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것임.

■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통해 세계적인 물 부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이미 물 스트레스 국가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물그릇을 키워 대비해야 함.
 - 여름철에 전체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대부분의 물을 바다로 흘려보내는 상황에서, 용수저장 능력을 키워 바다로 그대로 나가는 물의 10%만 활용해도 우리나라는 물 부족 문제에서 한 시름 놓을 수 있을 것임.
 - ‘21C에 물은 20C에 석유가 차지했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경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2.9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해양부 부동산 EWS지표 점검회의에 김현아 연구위원이 참여 1월 부동산 관련 주요 지표들에 대한 점검과 향후 정책과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해양부 규제심사위원회에 박용석 연구위원이 참여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안),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안) 등 2건 규제 심사」
2.11	과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천시 도시과에서 주최한 도시계획위원회에 김현아 연구위원이 참여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안), 도시관리 결정(안) 등 자문 및 과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심의

■ 신규 연구과제 발령 현황

과제명	주요 연구 내용
실적공사비 문제 해소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관련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협회에서 제안한 실적공사비 문제 해소를 위한 세 가지 대안들에 대한 비교 검토 실적공사비제도 관련 주요 개선 사항들에 대한 검토 및 추진방향 제시

■ 대정부 정책 건의 활동

- 부동산TV 주최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토론 참여
 - 2.12(목) 부동산 TV가 주최한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생방송 토론에 건설산업연구실 권오현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4대강살리기사업의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해 제시

■ 기타 연구원 활동

-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지역 순회 세미나 개최 예정
 - 연구원은 오는 3.3(화)부터 영남(부산, 대구), 호남(광주), 충청(청주) 등지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지역순회 세미나 개최 예정
 - 지역별 개최 일정

지역	장소	일자(예정)	공동주최기관
부산지역	부산	2009. 3.3(화)	부산발전연구원
충북지역	청주	2009.3.10(화)	충북개발연구원
대구경북지역	대구	2009.3.17(화)	대구경북발전연구원
광주전남지역	광주	2009.3.25(수)	전남발전연구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일자리 창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SOC 사업들은 바로 이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SOC 투자 전략에 대한 비판적 주장도 없지 않다. 비판론자들은 경제 구조가 선진화된 현 상황에서 토목 사업 위주의 SOC 투자를 통하여 미래 지향적 성장과 고급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SOC 투자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우선 SOC 투자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기능인력과 단순 노동력을 중심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경기 침체기에는 저학력, 저소득의 고용불안 계층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SOC 투자 사업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이유는 다른 어느 사업보다 사회적 취약 계층과 침체지역의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SOC 투자가 이런 단기적 효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SOC 투자는 궁극적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제공한다. 제대로 된 SOC 투자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효과다. SOC 투자를 단순히 물리적 시설물을 만드는 것으로 보는 단견적 시각을 버려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쟁은 어떤 사업을 선택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반대 주장의 논거를 들어보면, 대부분 대운하 추진에 관한 의혹들이다. 정부는 분명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추진을 위한 사업이 아님을 천명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녹색뉴딜사업으로 명명하고 있다. 사후 재난복구 위주로 추진되어 온 기존의 하천 관련 사업을 사전적으로 복원하고 또 다양한 관광 및 문화산업 발전과 연계시키려는 발상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이러한 기본적 접근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하루 빨리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역 I-O 모델로 분석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국적으로 21만 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가 예측한 19만 명보다 더 많다. 수계별로 투자된 건설투자비는 일차적으로 당해 지역 건설산업의 고용을 창출하고 이어서 지역 내 여러 산업, 심지어는 타 지역 산업의 간접적인 고용까지 유발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비전과 청사진을 조속히 제시하고 추진해 지방의 일자리가 조기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녹색사업의 슬로건에 걸맞게 지역의 환경, 관광산업 등의 발전을 촉진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아시아투데이, 2009.2.5>

윤영선(연구위원-ysyoon@cerik.re.kr)